

# 광주시 규제프리 경자유역 6개월 만에 '반토막' 추진

### 빛그린·도침·광주역·공항→ 빛그린·도침 우선 추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일자리 관련 제호 공약인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6개월 만에 반토막 추진된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연구용역 예산부터 세우는 절차상 편법까지 강행했음에도 용역사업 응찰자가 없어 광주시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키로 하고 기본계획과 연구용역 등의 초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이 시장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시절 내건 일자리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다.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광주역, 광주공항으로 이어지는 4대 벨트를 미래산업과 국제관광도시로 특화된 규제프리 경자유역으로 조성,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빛그린산단은 자동차 전자장치와 배터리를 포함한 친환경·스마트카, 도침산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제로빌딩을 주도할 에너지 신산업, 광주역 부근은 지역 혁신을 주도한 랩드마크로, 광주공항은 군공항 이전 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세부 공약도 내놓았다.

경자유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 관련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최대 5년 100%, 2년 50%), 연구소 설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임 후 2개월 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구용역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도 공식화했다.

그러나 취임 후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시정보고를 통해 사업범위가 빛그린산단, 도침산단, 군공항 부지 등 3곳으로 축소됐고 다시 연말 올해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빛그린산단과 도침산단으로 다시 압축됐다. 반년 새 4곳에서 2곳으로 반토막난 셈이다.

내부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테스크포스(TF)팀도 해가 바뀔 뒤에야 부랴부랴 구성에 나섰

경자유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2억3300만원도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용역과제 심의를 가치는 편법을 사용했다.

사업 축소와 예산편법 편성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 선정에 관한 첫 입찰을 응찰자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시 입찰에선 체면도 구기고 실익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른 경자유역 추가 신청이 오는 6월 진행되는 만큼 6개월 안에 수행기관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하는 계획이지만 행정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군 공항 등은 협의 사항이 많아 우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연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공모 일정엔 맞춰 용역 적격업체를 선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에서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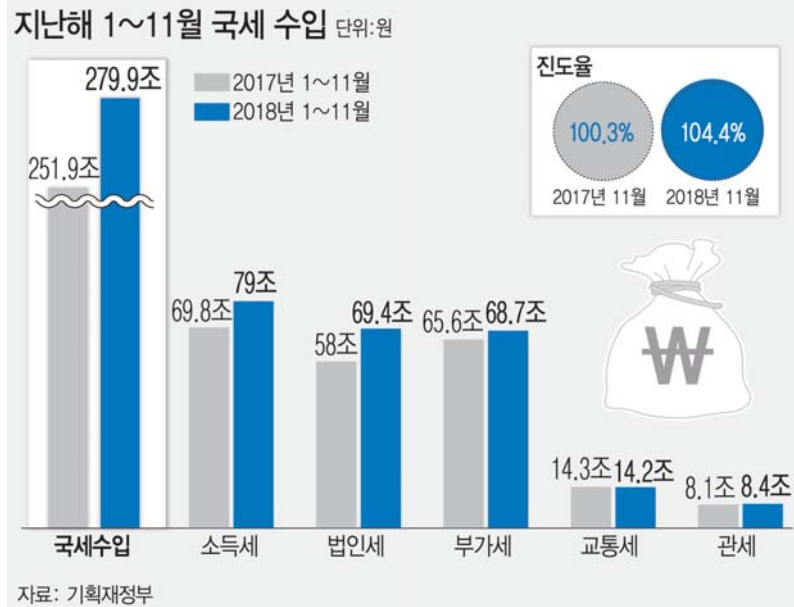
한편 경자유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민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전국적으로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코스닥 상승 마감 1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3포인트 하락한 2063.28에 장을 마감하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0포인트 오른 683.34에 마감했다.

## '세수만 호황'...작년 1~11월 세수, 연간 목표치 넘겨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세수 279조9000억



각종 경기 지표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만은 점차 두둑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10일 기재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제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추경 예산 기준 국제 수입(288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이 1년 전보다 4.1%p 상승한 104.4%로 100%를 넘겼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걸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건 목표치 대비 국제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11월 한 달 세수는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조9000억원이 걸렸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기게 됐다. 작년 11월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은 108.4%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0조2000억원 규모) 중 11월까지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257조9000억원)을 2조7000억원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을 역시 98.0%로 계획(92.0%)보다 1.0%p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 있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조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1~11월 누계로 따지면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8조8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는데,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세수가 호조였던 데 기인한다.

## 작년 은행 가계대출 830조...막바지 '부동산 호황' 증가 확대

### 진금대출 등 영향...제2금융 증가세 크게 꺾여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 전보다 더 늘어 83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막바지 부동산 열기에 불붙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완전히 제동을 걸진 못한 모습이다.

10일 한국은행의 '2018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의 '12월중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한 82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월중 증가액은 10월 7조8000억원, 11월 6조7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역대 12월만 놓고 보면 2015년 12월(6조9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은 연말 성과급 등의 영향을 받아 5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 증가액이 전월(4조38000억원)보다 확대됐

다. 주택담보 증가액은 연중 최대치이자 지난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TD) 전세대출 일부가 10월부터 은행채원으로 활용되면서 전세대출 취급액 1조원 정도가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계상된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율러 2~3년전 분양된 아파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자금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수준(3조1000억원)보다 축소된 2조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집담대출은 같은기간 1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가액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의 연중 증가액도 60조5000억원으로 1년 전인 2017년(58조8000억원) 수준보다 확대됐다. 가계대출이 지난 2014~2016년 매년

평균 약 76조원씩 급증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부동산 시장 호황 때 쏟아진 아파트 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면 크게 꺾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힌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축소됐다. 1년 전 같은 달(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연중 증가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년 수준(13조7000억원)에 비해 반토막났다.

이에 지난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75조1000억원(5.9%) 증가해 지난 2015년(109조6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시행되고, 가계 부문에 대한 경기대응 완화자본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